

탁아소 필요아동 82만명

보사부 92년까지 달동네 1천2백개 계획

별도법 만들어 설립 지원해야

부는 최근 탁아소의 필요성 강조하는 여론이 높게 일자 복지법 등을 개정, 지역탁아소 설립을 추진하고 직장탁아소 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심각한 사회의 탁아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보사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맞벌이부부의 자녀 등 탁아를 필요로 하는 6세 미만의 어린이는 82만명이며 이들을 돌보기 위

해서는 수용인원 10명 규모의 가정탁아소 2만5천7백개와 수용인원 70명 규모의 시설탁아소 8천20개 등 모두 3만3천7백20개의 탁아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사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2백50개의 탁아소를 3월중으로 세운 뒤 점차 늘려 92년까지 모두 1천2백40개의 탁아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사부는 일반지역에 필요한 탁아소 5천5백곳과 가정탁아소 2만5천7백곳은 오는 95년까지 세제지원 등으로 민간차원에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 계획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지는 확실치 않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고쳐 탁아정책을 펴는 수준에서는 탁아문제를 해

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농촌·도시·직장 모두에서 활발하게 탁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탁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사위원회에서도 아동복지법 개정만으로 탁아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빠른 시일 안에 탁아법 제정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